

주간 이슈 리포트

62 호

2004년 11월 세째주(11/15 ~ 20)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가? |
| - 노동자 세상: | 공무원 노조를 보는 싸늘한 눈길 |
| - 통신정책: | 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 수위논쟁 |
| - 정자동 6층에서 | 노무현 대통령, 한뎀 '공무원 노동3권' 옹호 |
| - 만화방 | 시사 만화 |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가?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고달프고 힘겨운 서민들의 삶, 추억으로 잊혀져가는 연탄걱정을 하는 빈민층을 위한 연탄은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자 등에게 하루 5장씩의 연탄을 무료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배달원 자원봉사자들이 한달에 100장씩 배달해 준다고 한다.

날씨보다 더 춥기만 한 우리 경제의 불황의 늪에 자꾸 뒤돌아보지는 어두운 절망 앞에 이런 따듯한 뉴스에 눈을 돌려 희망을 찾아본다.

사회전반에 걸쳐 지금보다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어져서.오마이뉴스의 고태진 기자의 칼럼을 옮겨적는다.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

우선 시민들의 재판 참여가 2007년부터 이루어진다. 1차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태로 이루어지며, 헌법 개정 등을 거친 뒤인 2012년부터는 시민들의 의견이 재판에서 강제력을 지니는 형태로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것이라 한다.

물론 이렇게 바뀌게되는 제도가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지체 높은 법관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까마득히 높고 멀기만 하던 법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개방형 판사임용제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개혁은 법의 주인으로서의 시민의 지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정원과 관련된 과거의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2일 발족됐다. 민간위원 10명과 국정원쪽 5명의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과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이 고압적이고 폐쇄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정원의 과거사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치면서 공작 정치와 불법 정치사찰 등으로 악명이 높았고, 지금도 말끔히 풀리지 않고 있는 최종길 교수 등의 의문사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는

국정원의 과거사가 제대로 규명되어 국정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을 위한 획기적인 자세 변화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재외공관장을 공모하기로 하고 그 비율은 인재풀과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되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한다. 또한 재외공관장과 해외 주재관들이 투자유치 실적이나 교민들의 영사업무 만족도를 평가받기 위해 성과이행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고 한다.

물론 재외공관장의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전제되어야겠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사곤 했던 관료주의적 영사 업무가 좀더 국민의 편의를 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물론 암울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눈에 띄고 거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역사의 진보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철권 통치의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수구'들의 모습을 보면 역설적으로 그러하다.

역사의 진보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른바 4대 개혁법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것은 사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것이다. 지금껏 '나라꼴 같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작업이다.

과거에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한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악법을 없애자는 것, 사립 학교를 재단의 사유물이 아닌 공익적 학교로 만들자는 것, 언론을 시장판이 아닌 사회적 공기로 만들자는 것 등 모두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거창하게 개혁이라 이름 붙일 것도 없다.

단언하지만, 역사 진보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총칼로도, 철권 통치로도 막지 못한 물줄기이다. 언론의 탈을 썼어도, 애국 정치인의 가면으로 가렸어도 그들의 '판지 행각'은 오래 가지 못한다.

굳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고자 한 이유이다.

공무원 노조를 보는 싸늘한 눈길

공무원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는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초강경 대응자세를 굳히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이에 발맞춰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웬 파업이냐며 성토하고 있다. 마치 20년의 세월을 거꾸러 거슬러 올라가 80년대 '선생님이 웬 노동자'하던 시대를 보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다시금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보수언론이나 정치가나 있는 자들의 몫이 아닌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세상은 바뀐다.

한겨레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석춘씨의 글을 통해 공무원이 왜 노동자인지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2004년 11월, 우리 사회의 '마녀'가 되었다. '사냥'이 한창이다. 은유가 아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나섰다. 대검 공안부장이 직접 경고했다. 엄중 처벌하겠단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안당국의 시퍼런 서술 뒤에는 이른바 '여론'이 있다. '네티즌'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의식이 강렬한 사람들조차 노동조합에 이르러선 막무가내다. 뿌리깊은 편견을 드러낸다.

정치의식 강해도 노조엔 질은 거부감

고백하거니와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의 노사관계를 '공부'하러 들렀을 때다. 참으로 부끄러운 경험을 했다. 암스테르담 공항이었다. 비행기가 예정시간이 지나도 뜨지 않았다. 기내방송이 나왔다. '엔진 이상'이란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다시 안내방송이다. "엔진 점검을 마치고 이제 떠난다." 활주로로 나갔다. 그러나 멈췄다. 되돌아왔다. "엔진이 켜지지 않아 다시 점검한다." 그렇게 다시 2시간. 좁은 기내에서 기다렸다. 3시간이 흘러서야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었다.

정작 문제는 다음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장의 음성이 들렸다. 필자는 짧은 영어 청취력 탓에 잘못 들었는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장은 분명히 말했다.

"승객 여러분. 초과시간으로 네덜란드 노동조합법에 따라 승무원들이 쉬어야 하기에 기내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언뜻 필자도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럽인들 대다수는 말이 없었다.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물었다. 대답은 간명했다.

"승객들의 불만도 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3시간 늦게 떠났지만, 조금만 더 늦춰졌다면 기장부터 모든 승무원을 바꾸게 되어 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의 안전 아닌가."

그 순간 많은 '장면'들이 눈앞에 스쳐갔다. 만일 한국에서 우리 비행기가 그렇게 늦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만일 기내방송에서 기장이 그렇게 방송했다면, 한국인 승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항공안전'을 내걸고 파업을 했을 때를 보라. "이 가뭄에 웬 파업" "고액 연봉 조종사들의 이기주의" 따위가 부자신문들의 지면을 도배질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조종사 노조가 건설된 뒤, 대한항공의 항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 조종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결코 '배부른 이기주의'가 아닌 절실한 까닭이다.

친일·군부독재·부자 신문의 집요한 사냥

그렇다. 노동조합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견인차다.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오늘 천박한 까닭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비인간적인 살벌한 경쟁에 내몰리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아직 12%에 지나지 않아서다. 그 뿐인가. 한 세기 가까이 노동자에 대한 '마녀 사냥'을 친일신문, 군부독재신문, 부자신문들이 자행해왔다.

보라.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은가. "이 가뭄에 웬 파업?"이라는 저 부자신문의 논리를 우리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가 어려운데 웬 공무원 파업?'이라고.

공무원 노조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살천스레 쏟아 보내는 '저주'를 보라. 세 신문의 사설들에 담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선동, 그것은 말 그대로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전혀 없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유럽의 나라들이 엄존하고 있는 데, 그것을 '허용'하면 정부기능이 마비될 듯이 호들갑 떨고 있지 않은가.

공안언론과 공안당국의 손발 맞추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기에 그래도 묻고 싶다.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문제에 대검 공안부가 나서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

<조선일보>는 11월9일 사설에서 물었다. "손公勞(전공노)는 싸늘한 국민눈길도 못 느끼나." 참으로 묻고 싶다. '싸늘한 눈길'의 주체는 과연 국민인가. 부자신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주입한 '마녀 이데올로기'인가.



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 수위 논쟁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지국 공용화가 얼마나 이뤄져야 하는 가를 두고 정부와 국회, 통신사업자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를 얼마나 강제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별로 설비투자(CAPEX) 비용이 달라지고 이는 곧 서비스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기지국 공용화뿐 아니라 공동망 구축까지 포함하고 어길때 처벌 조항까지 담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느냐 또 설비경쟁을 제한하고 네트워크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 와이브로 사업권 준비사업자중 하나로텔레콤의 입장과 기존 유·무선 통신 설비를 갖춘 KT와 SK텔레콤의 입장을 아이뉴스24를 통해 알아본다.

11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통부는 "와이브로 허가심사시 기지국공용화 계획을 평가해 중복투자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공립공원 등 특수지역은 기지국공용화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지국공용화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용화 계획 제출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사업자가 제시한 공용화 계획이 저조할 경우 각 체신청에서 시행중인 '공용화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W-CDMA, 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기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정위원 다수가 환경훼손과 중복투자를 막으려면 강력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통부 통신기획과·주파수정책과·전파이용제도과·통신안전과가 위와같이 답변한 것.

하지만 정통부가 기지국 공용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그 수위에 있어서는 논란이다.

▲ 기지국 공용화뿐 아니라 공동망 구축까지 포함하고 어길때 처벌 조항까지 담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느냐 ▲ 중복투자 방지대책은 통신사 투자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이나 설비경쟁

을 제한하고 네트워크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느냐가 다르다. 이와관련 와이브로 사업권 준비사업자중 하나로텔레콤은 강력한 공용화정책을, KT와 SK텔레콤은 다소 느슨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 내부에서도 기지국 공용화 정책 수위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강력한 공용화 정책 요구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신규서비스에서 까지 설비경쟁이 서비스경쟁을 좌우하도록 해서 안된다"면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차세대통신서비스가 출현하려면 기존 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최소화되고 서비스 품질경쟁, 아이디어 경쟁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와이브로 허가심사시 기지국공용화 계획을 평가(심사배점 5점)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시 KT나 SK텔레콤에 공용화를 요구해도 안들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지국 공용화 계획서를 기반으로 (정부가) 이행을 점검한다면 기지국 공용화 정책의 실효성이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순엽 하나로텔레콤 부사장은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와이브로 설비투자는 단독으로 전국망 구성시 5년동안 1조의 소요를 예측하고 있지만, 공동망 구축이 들어가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뿐 아니라 KT조차도 전국망이나 공동망이나를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지국 공용화뿐 아니라 공동망 구축까지 기대했다.

와이브로 사업권에는 단독으로 도전하지만, 공동망 구축이나 기지국 공용화를 통해 투자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이다.

◆KT-SKT, 절충점 찾아야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여유 자금이 있고, 기존 유·무선 통신 설비를 갖춘 KT와 SK텔레콤은 기지국 공용화 정책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이를 강력히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회사별로 지금까지 투자한 설비가 다르고, 주력 서비스도 같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동망 구축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

와이브로의 설비투자는 기존 설비와 연동 또는 보완되어야 하기에 각 사별로 다른 정책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KT는 음성은 KTF CDMA와 결합되면서 데이터는 무선랜+와이브로에 기반한 전국망 구축에, SK텔레콤은 800메가 셀룰러 대역과 WCDMA를 보완하는 개념의 와이브로 망 구성을 생각하는 등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설사 일부 지역에서 하나로와 공동망을 구축한다 해도 그것은 사업자간에 자율협의를 따른 것이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와이브로 허가 심사기준중 기지국공용화 계획 부분에 잡혀진 5점은 큰 비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국공립공원 등 일부에서는 강제할 수 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한때 ‘공무원 노동3권’ 옹호

현 여야 핵심인사들과 함께 88년 관련법안 대표발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과거 공무원에 노동3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노조의 투쟁을 강경 탄압하는 가운데 세상에 알려져 이들의 도덕성과 정부 입법안의 정당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11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8년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찬 국무총리(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내용이 담긴 또 다른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당시 통일민주당 의원) 의원 등도 법안을 제안하거나 발의에 참여했으며, 양김 전 대통령도 발의자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 법안은 최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16대 국회 시절인 2002년에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더욱 진전된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이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단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 정권 실세들이 과거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도 모자라 탄압하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파업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노무현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탄압이 '마녀사냥'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 행위인 찬반투표마저 경찰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투표용지·투표함 탈취, 사무실 봉쇄·점거 등의 물리적 탄압이 동원

됐으며, 무차별 연행이 벌어졌다. 심지어 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이라 부를 야만적 탄압까지 동원됐다.

공무원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파업권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성격이다"고 못을 박는 등 잇따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대표하는 이부영 의장의 태도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태도를 종합하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허용할 수 없다. 이에 저항하면 엄정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강경대응의 정점에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비록 공식적 언급은 없었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다. 총리나 각료, 여당 지도부의 언행 속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쳤다. 결국 정부안 내용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변절'이자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16년전 이들의 태도는 지금과 180도 달랐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기본권 확보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면서 1988년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안(노조법중개정법률안과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수 의원(당시 평화민주당)의 대표발의로 11월에 제출된 입법안과 노무현 이인제 정정훈 의원(당시 통일민주당)이 12월에 대표발의한 입법안이 그것이다. 특히 이들 법안의 발의자 명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이상수 안),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노무현 안) 등 역대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들어 있다.

당시 입법안 탄성 절로

이들 법안을 뜯어보면 지난 9월14일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입법안과 "어찌면 이리도 똑같은지" 절로 감탄이 나올 만큼 노동3권이 오롯이 담겨 있다. 법안은 '현역군인, 경찰·교정·소방 공무원을 뺀 모든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의 쟁의행위는 공익사업에 준하여 법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국회 노동위원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단체행동권을 뺀 대안법률안에 합의했고 이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나마 잘 알려진 대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법외'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특히 1988년 7월8일 노무현 당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행한 발언의 한 대

목은 지금 들어도 '가슴을 찌르는' 바가 있다. "권력분립이나 복수정당체제가 부인되었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 볼 수 없듯이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노조와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무원 노동3권 보장입법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서 신계륜 의원과 함께 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에서는 앞선 입법안과 '붕어빵'이다. 이 법안은 나아가 단체교섭권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등 한층 진전된 내용이다. 그 내용은 민주노동당 제출법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 '보수 등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협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협 중 유리한 기준은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한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정권 핵심인사 대부분 발의 동참

이처럼 과거에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며 국회 안에서 당당히 큰 소리쳐가며 법안통과에 힘을 모았던 여야 지도부가 지금에 와서 정반대로 태도를 돌변한 것은 단순한 말바꾸기가 아니다. 이같은 '변신'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과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응당 뒤따라야 함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게 보수정치의 못된 버릇이었다.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안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한때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한 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우리는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을 버리고 보수·기득권층의 편에 서기로 했다"고.

<기사제공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만

화

방

